법무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6.(금)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모색한다

- 법무부·행정안전부, 11월 5일~6일 호남·제주권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공동으로 11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서 「2026년 제4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

※ **(공동주최)**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이민정책연구원·전남광주시청·전북도청·제주도청

이번 교육은 호남·제주권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과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정책과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26년 교육 일정)** ① 「동포정책」 주제 전국교육 ('26. 7. 16.) ② 수도권 ('26. 8. 28.) ③ 강원·충청권 ('26. 10. 1. ~ 10. 2.) ④ 호남·제주권 ('26. 11. 5. ~11. 6.) ⑤ 경상권 ('26. 12월)

첫째 날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동포정책, 지역기반 외국인정책, 외국인정책 통계플랫폼 활용 등을 소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사회통합과 지역기반 비자제도 등을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여 지역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전남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과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지역과 외국인 주민 연계 정책을 비롯해 익산시의 지역사회 통합, 서울글로벌센터의 유학생 취업·정착,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활용 사례 등 다양한 지역 외국인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이틀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중앙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교육을 통해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와 경험을 공유하고,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외국인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105
		담당자	사무관	이종현	02-2110-42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